

투데이 칼럼

### 한국과 쿠바 전격 수교

한국이 쿠바와 수교를 시사 시켰다. 김정은 정권에 정치, 외교적으로, 적잖은 타격이 될 것 같다. 쿠바는 우리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유엔 회원국 중엔 시리아만 미수교국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쿠바는 북한의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든든한 우군이자, 중남미 지역 외교와 소통의 거점 역할을 해 왔다. 북한은 쿠바와 한국의 국교 정상화 이후 관련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주일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연초부터 이어졌던 포격, 순항 미사일, 핵 어뢰 등 다양한 군사 도발도 잠시 소강상태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김정은의 마지막 공식 일정은 지난 14일 오전 북한 해군에 장비할 신형 지상 대해상미사일인 '바다수리-6형'의 검수사격을 지도한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이날 밤 한국과 쿠바는 외교관계 수립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김정은의 잠행은 22일까지 북한 보도를 기준으로 7일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2주년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과 관련한 각종 행사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한·쿠바 수교로 인해 전월 정비가 필요한 만큼 김정은이 다양한 외교적 선택지를 두고 장교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복규  
논설위원

이러한 다양한 외교적 선택지를 두고 장교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국과 쿠바의 수교 발표 다음날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나서 북·일 정상회담에 호응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다. 3월 중순 러시아 대선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할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거론된다.

특히 일본을 공략해 한·미·일 공조를 흔들며 반제·반미 외교 노선을 재설정하려는 의도도도 읽힌다.

하지만 북한이 조건으로 내건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핵·미사일 거론 불가'에 대해 일본 내 여론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결국 불법 행위의 '공범'인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한층 더 과시하는 게 김정은의 1차적인 선택지로 보인다. 제재 폭풍에 헤

당하는 고급 승용차를 주고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정상 간 '케미스트리'를 부각시키고 있다.

군사·외교 분야에 이어 노동·농업·정보산업·수산·체육 대표단을 잇달아 러시아에 파견하며 양국 간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밀착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국과 쿠바의 수교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공급적으로는 사상 단속을 강화하면서 민심 이반을 방지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경제 부문에서의 '규율'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김정은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지방 발전 20x10 정책'의 관철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요즘 국가경제 사업에서 '무규율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경제 규율을 강화

게 세우기 위한 사업을 당적, 법적으로 적극 밀어주고 담보해 줘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지난달 초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부의 지린(吉林)성의 공장 여러 곳에서 임금 체불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섰던 사태도 주목된다.

단순 파업이 아니라 폭동 수준의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재발 방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초유의 폭동 사태로 인해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는 체제 보존을 위한 외화벌이와 사상 이완 우려라는 모순적 상황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고민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은 유일영도체계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새삼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동요하지 않고 김정은 정권에 충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당장은 규율과 통제를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에 방점을 두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한·쿠바 수교에 따른 외교적 압박과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지도발을 할 수도 있다. 국면 전환용 북·일 또는 북·러 정상회담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 사설

#### 도내 외국인 정책

전북특별자치도내 외국인 정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민 정책'은 이제 '유입'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통합'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내 어느 광역단체는 외국인 인입국부터 정착, 지역사회 통합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 체류 외국인 지원센터 문을 열었다. 특히 지역 특화일자 사업 안착과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정책을 통합해 수행하는 전담 부서도 만들었다.

외국인 인력은 일자리 부서, 계절근로자들은 농업부서, 그리고 다문화는 또 다문화부서 등 서로 나누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수요와 유학생 취업 수요를 미스매칭이 없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지역사회에 통합해서 지역 주민으로 지역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난해 말

현재 전북지역 등록 외국인인 전체의 3퍼센트 정도인 4만명이다.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1만1,000여명으로 가장 많고, 유학과 일반연수 1만 400명, 결혼 이민과 영주, 거주가 8,000명이다.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거주하고 계절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방문 동거 비자를 받은 외국인도 3,300명이 넘는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려면 외국인 정책과 수용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비용이 싼 노동력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의 필요와 수용 가능한 규모 등을 살펴야 한다.

외국 인력의 수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를 넘어서야 된다. 일자리 잠식과 복지비용 증가 논란 등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해야 한다.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 악성 체납자 추적정수반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들이 여전히 즐기고 있다. 이들을 추적하고 찾아내는 공무원들이 있다. 일명 '추적정수반'이다. 이들은 지방세 징수법 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있다.

10년 차 공무원인 어느 주무관은 지난 1월 8일 인천시 세금 추적정수반인 '오메가'에 배치됐다.

그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해서 가택 수색 및 체납 처분을 하고 있다.

고질 체납자 중에는 4,687만 2,000원의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토록 고지 받은 사람도 있다. 그런데도 무슨 가택 수색이나 오하러 큰소리는 사립이다. 그러면서 완납 말고 분할을 요구하기도 한다.

악성 체납자 가운데 차량을 견인할 수 없도록 장애물을 설치하는 건 기본이다. 일부러 압류 대상 차량을 파손해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악질 체납자들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천은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6대 광역시 중 체납이 가장 많은 곳이다. 2023년에 발생한 법인 체납액은 1천35억 원에 달하며, 개인 체납액은 무려 2천16억여 원이나 된다.

이들 가운데는 내교자 하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추적정수반은 그런 체납자들에게 대해 복지센터에 복지 연결을 해주기도 한다. 추적정수반 대원들이 보람을 느끼는 일이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 의무 가운데 하나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 삭감은 건축 재정보다 세수가 부족해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문제는 여력이 있으면서도 체납을 일삼는 고질 체납자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법적 제재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다. 강도 높은 악성 체납 대책이 절실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두바이 제트슈트 조종 경기 펼치는 참가자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제트슈트 조종 경주가 열린 조종사가 비행하고 있다. 조종사들은 두바이 마리나의 고층 건물을 배경으로 손과 등에 있는 제트 엔진을 조종해 빠르게 움직이며 레이스를 펼쳤다. 조종사들은 고급 스포츠카보다 강력한 엔진의 제트 슈트를 착용하며 최대 시속은 120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윤리심사회 출석, 사과하는 기시다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중의원(하원)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해 사과하고 있다. 지진당 파벌 정치자금 문제로 열린 이번 윤리심사회는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열렸으며, 현재 총리가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